

문재인의 갈팡질팡, 좌우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한다

이 놀라운 노무현 기사! (제자부)

관련 기사 2, 3, 6, 8면



그림 양효영

집권 닥 달 만에
위기 문재인 정부

3면

비정규직 교·강사
정규직화 약속
위반한 문재인

2면

독성 생리대
여성 안전보다
기업 이윤
우선하는 정부

5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서방이 부추기는
동아시아·동유럽 불안정

7면

신간 소개

트로츠키 《그들의 윤리, 우리의 윤리》
마르크스주의에도
윤리라는 게 있나?

10면

《오늘날 한국의 노동계급》
마르크스주의로 본
노동계급의 현실

11면

학교 비정규직 교·강사 “정규직 전환 제로” 결정 철회하라

9월 9일 교육부가 기간제 교사와 비정규직 강사에 대해 “정규직 전환 제로”를 결정하는 가이드라인을 시도교 육청에 제시했다. 4만 7000명의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과 1만여 명의 영어회화전문강사와 초등스포츠강사 등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부한 것이다. 학교 비정규직 교·강사들이 수차례의 집회와 농성을 벌이며 정부에 촉구했지만 정부는 귀 기울이지 않았다.

기간제 유치원 방과후 강사와 유치원 돌봄강사 1000여 명은 무기계약 전환이 결정됐는데, 이미 돌봄 강사 대다수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 온 추세에서 당연한 조치일 뿐이다.

게다가 정규직화 없이 기간제 교사를 줄여간다고 밝혀 기간제 교사들은 해고 사태가 벌어질 것도 우려하고 있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 해고 예고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불안은 클 것이다.

정부는 이미 7월 2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에서 비정규직 교·강사를 ‘전환 예외’로 명시했다. 그 뒤 교육부가 이들에 대한 전환 여부를 심의하겠다고 했을 때 해당 노동자들은 한 가닥 기대를 품었다.

그러나 ‘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하며 당선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던 문재인은 결국 그 기대를 무참히 짓밟았다. 사드 배치 강행에 이어 문재인 스스로 자신의 대표 공약을 내던져 버린 것이다.

“형식적으로 심의위원회 결정을 취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결정”(9월 11일 민주노총, 공공·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공동 성명)이었다. 정부는 “아무런 행동도 의지도 보여 주지 않”았고, “자신들의 책임을 전환심의위원회에 전가하는 무책임”(9월 11일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성명)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특히 정부는 올해 교사 선발 인원을 대폭 축소해 갈등을 더 부추겼다. 비정규직 교·강사들과 임용교사 준비생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것처럼 보



9월 11일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결정 규탄 기자회견

이도록 몰고 갔다.

이 과정에서 차별과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를 해 온 비정규직 교·강사들은 ‘무자격자’ 취급까지 받는 모욕을 당했다. 노동자들이 문재인에게 ‘농락당한 기분’이라며 깊은 분노를 쏟아내는 것은 당연하다.

시금석

이번 교육부 가이드라인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와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의 시금석으로 여겨져 왔다.

교육기관은 비정규직 백화점이라고 불릴 정도로 온갖 형태의 비정규직이 존재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3분의 1이 일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십수 년간 교육을 책임져 온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함으로써, 가이드라인의 제1의 원칙으로 제시한 ‘상시업무 정규직화’를 완전히 공문구로 만들었다.

교육부의 잘못된 결정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어질 다른 정부 부

처들의 가이드라인에도 영향을 줄 것이 분명하다.

학교 비정규직 교·강사들의 정규직화가 기존 임용 체계를 뒤흔든다며 반대한다면, 다른 공공 부문에서도 ‘특수한’ 이유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전환 대상에서 배제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 뻔하다. 이미 공공기관, 지자체, 국공립 병원 등에서 계약 기간 만료자 해고 사태와 자의적인 정규직 전환 대상 배제 등 심각한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정부가 재원 투자를 회피해서는 일자리 확대와 정규직화가 공염불이 되기 십상이라는 점도 보여줬다. 정부 비정규직 대책이 매우 미흡한 것에는 비용 절감이라는 정부 목표가 크게 영향을 미쳤다. 대다수 공공기관 사용자들은 비용 최소화에만 급급한 실정이라 정규직 전환 논의조차 제대로 시작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질 좋은 교육을 위해서는 교사를 대폭 충원해야 한다. 비정규직 교·강사 전원 정규직화하고 신규 채

용을 늘려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학령 인구가 줄어들어 필요한 교사 수가 줄어들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연대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첫 시작부터 문재인 개혁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나면서 노동운동이 문재인 정부의 개혁 파트너 구실(협력과 견제)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약점이 있음을 드러냈다.

사실 정부의 비정규직 가이드라인 발표 직후에도 개선이 일부 있을지라도 정규직 전환 대상과 방식, 예산 등에서 문제가 많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노총과 해당 산별노조들은 노정교섭으로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하려 했지만, 결국 정부는 핵심 사안들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요구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투쟁이 중요하다.

교육부 발표 이후, 비정규직 당사자들만이 아니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비스연맹이 문재인 정부를 규탄

했다.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은 ‘노동관계 전면 재고도 고려’하겠다고도 했다.

학교 비정규직 교·강사들은 정부의 결정을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 본부는 9월 하순 파업도 예정하고 있고,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도 투쟁을 이어 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이런 투쟁을 옹호하고 확대할 계획과 방향을 적극 제시해야 한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이젠 민주노총이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정부 발표 전 전교조 중집이 결정한 학교 비정규직 교·강사 정규직화에 반대하는 입장은 유감스럽다. 정부가 위선적인 정책을 합리화하는 데 필요한 명분을 전교조 지도부가 제공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전교조 대의원대회에서는 전교조 중집의 무원칙한 입장에 반대하는 수정안이 발의됐고, 비록 중집의 결정을 뒤집지는 못했지만 대의원 3분의 1이 이를 지지했다. 이는 전교조 좌파 활동가들이 이후 더 확고하게 비정규직과 정규직 연대를 건설해 나가야 할 과제가 있음을 보여 준다. (관련 기사 4면)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지도부는 전교조 중집이 잘못된 결정을 바꾸도록 적극 개입하지 않았다. 전교조 지도부를 의식해 기간제 교사들의 요구와 투쟁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기를 꺼렸다. 현 민주노총 집행부가 강조해 온 “계급대표성” 획득은 이런 투쟁을 지지하며 정규직과의 연대를 건설하는 것에서 구현될 수 있을 텐데 말이다.

일부 노동운동 좌파 단체들도 내부이견을 이유로 기간제 교사의 전원 정규직화를 지지하지 않았다.

정부에 맞서 제대로 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성취하려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연대 원칙을 확고하게 고수하며 투쟁을 조직할 좌파의 구실과 개입이 중요하다.

이정원

잇따른 집배원 사망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를 부르는 근로기준법 59조 전면 폐기하라



2016년 기준 한국 노동자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069시간으로 OECD 2위를 차지했다(OECD 회원 35개국 평균 노동시간은 1764시간). 이 순위는 수십 년간 변함이 없을 정도로 한국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은 악명 높다.

특히 집배원들은 한국 노동자 평균보다도 무려 800시간 이상 많은 2900여 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노동자운동연구소). 많은 집배원들이 물량을 처리하기 위해 점심식사를 김밥과 우유 등으로 간단히 때우고 일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연

3000시간 넘게 일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을 정도다. 초장시간 노동은 노동자들의 과로사와 자살로 이어진다. 그래서 집배 노동자들은 문자 그대로 “살인적 노동시간”이라고 부른다.

9월 5일 서광주우체국 소속 집배원이 자살한 것은 인력 부족으로 말미암은 끔찍한 장시간·중노동에 놓여 있는 집배 노동자들의 현실을 다시금 비극적으로 보여 줬다. 올해에만 우체국 노동자 15명이 과로사 추정 사망과 자살, 사고로 숨졌다. 그중 12명이 집배원이다(비슷한 일을 하는 위탁택배원

1명 포함).

그래서 정부기관인 우정사업본부는 매해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된다. 우체국 노동자들은 자조하며 우정사업본부를 우정“사망”본부로 불려야 한다고도 한다.

연이은 집배원들의 사망은 역대 정부와 우정사업본부의 경영 효율화와 비용 절감 정책이 낳은 결과다. 우정사업본부는 적은 인력을 유지하며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떠넘겨 왔다.

최근 마산창원거제산재추방연합이

▶ 3면으로 이어짐

문재인의 첫 위기

촛불 염원 외면하고 우파의 기만 살려 준 대가

문재인 정부는 “촛불 시민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를 자임해 왔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20대 국정 전략”의 첫째 항목이 “촛불 민주주의 실현”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박근혜 정권 퇴진 촛불 운동의 요구를 대놓고 무시하고 있다.

문재인은 9월 7일 경북 성주에 사드 발사대를 폭력적으로 추가 배치했다. 사드 배치 철회는 퇴진 운동의 공식 요구였다.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얘기해 놓고 정작 초·중등학교 비정규직 교·강사의 정규직 전환을 거부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가로 정규직 전환하는 것은 “제로”다.

대북 정책도 문제투성이다. 친미 행보를 거듭하며 불안정 고조에 한몫한다. 문재인은 트럼프와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 해제에 합의했고, 국방장관 송영무는 핵잠수함과 김정은 참수 부대 창설 운운하고 있다.

박근혜 퇴진에 일익을 담당한 노동 운동에 대한 국가 탄압의 원상 회복은 거의 언급도 안 된다. 전교조와 공무원 노조의 인정이나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석방은 정부가 결심만 하면 되는 데도 말이다.

인사도 지지층에게 실망을 줬다. 최근에는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에 뉴라이트와 사이비 과학인 ‘창조과학’을 옹호하는 박성진을 임명하려 한다.

요컨대 문재인 정부는 촛불의 염원을 멀리하고 우파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지지층 균열이 시작되는 첫 위기를 겪고 있다. 물론 이 위기의 심각성을 과장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위기와 통합을 거듭하며 더 심각한 위기로 나아갈 것 같다. 그리고 이는 진보·좌파 때문이 아니라 문재인이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폭력으로 사드를 긴급 배치한 직후, 친문재인적 매체인 《한겨레》조차 1면 헤드라인을 “문재인 정부마저”로 달았다. “절차적 정당성 저버린 정부”라고도 비판했다. 경북 성주 주민들은 사드 배치 철회를 위해 문재인을 지지한 것을 후회한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 어떤 도움도 바라지 않을 것이고 희망도 가지지 않겠다.” 이들이 투쟁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으므로 이런 정서는 더 확산될 것이다.

마치 2003년 이라크 침략 전쟁 파병 결정, 전북 부안의 핵폐기장 반대 운동 폭력 진압, 노조 파업 폭력 진압 등 일련의 지지층 배신 정책으로 위기를 겪은 노무현 정부가 연상된다. 노무현은 결국 임기 첫해에 “대통령 못해 먹겠다”는 말까지 했고, 이듬해 초 국회에서 우파에 의해 탄핵되는 위기를 겪었다.

물론 그때와 세력 균형이 달라서 문재인 정부는 지금 당장 그런 정도의 곤경을 겪지는 않는다. 문재인인의 높은 국정수행 지지율은 9월 들어서도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 자유한국당 등 우파가 당장 득세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그럼에도 취임 후 줄곧 80퍼센트를



2003년 노무현 정부의 첫 위기를 닮아가는 문재인 7일 사드 배치 강행으로 영망이 된 소성리(오른쪽 위), 낙마한 김이수(오른쪽 아래)

상회하던 지지율이 70퍼센트대로 떨어지고, 민주당 지지율도 취임 후 처음으로 50퍼센트 밑으로 내려갔다. 문재인 지지 이유 가운데 가장 비율이 높던 “국민과의 소통 및 공감” 항목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것도 시사적이다. (9월 10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정례 조사 결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이 국회에서 좌절된 것도 상징적이다. 사법부 내 개혁파라는 김명수의 대법원장 임명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알량한 사법 개혁조차 시작부터 흔들린 것이다.

물론 김이수 인준이 부결된 뒤에 자유당 의원들이 서로 열싸안은 건 역겨운 일이다. 극단적 중도를 추구하겠다는데니 우파 좋은 일만 하고는 ‘존재감’을 과시했다고 으스대는 안철수도 골 보기 싫다.

그런데 13일 국민의당이 박성진, 탁현민 등 문제 인사의 경질과 김이수 인준을 맞바꾸자고 제안한 사실이 드러났다. 우파의 기를 살려 준 김이수 부결에는 문재인인의 우경적 정책뿐 아니라 문제 인사 보호에도 그 책임이 있는 셈이다.

문재인의 선택

문재인 정부의 첫 정치 위기는 표면상 노무현 정부의 첫해의 위기 양상과 다르지만, 위기를 불러오는 동학은 같다고 할 수 있다.

즉, 경제·안보 위기 등 좌우 선택의 기로에서 민주당 정부가 노동계급이나 개혁 지지층 대신 우파의 손을 잡았다. 대선 후 사기가 떨어진 우파의 기를 살려 준 셈이다. 반면, 지지층에서는 균열과 불만이 나타나고 있다.

문재인은 스스로 우파적 정책을 취함으로써 일부 중도우파층을 흡수해 오히려 우파의 입지를 줄일 수 있다고 여길지 모르겠다. 그러나 안보에서 대결 기조를, 경제 문제에서 친기업 기조

를 강화할수록 전통적 우파들의 기는 살아나게 마련이다. 그리고 진보파의 환멸은 자라나기 시작한다.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친기업·친제국주의 정책을 펴는 데서는 우파가 더 일관되기 때문이다. 10여년 전에도 노무현 정부의 배신적 우경화가 바로 이런 동학을 작동시켜 이명박의 집권을 불러왔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노동운동과 진보·좌파가 문재인 정부에게 기대를 걸고 행동을 유예하거나 정부의 개혁(성공)을 돕겠다는 것은 위험하다. 이는 우파를 막는 것에도 장애가 된다.

문재인 정부를 통해 개혁을 얻어 내겠다는 것이 공상적임이 좀 더 분명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하겠다는 개혁은 박근혜가 못한 온갖 친기업 개혁들을 부드럽지만 효과적으로 하려는 것이지, 노동계급을 위한 것이 아니다. 문재인은 좌우의 비판에 처할수록 좌파보다는 우파와 손잡기로 기를 것이다. 그의 기반이 노동계급이 아니라 지배계급이기 때문이다. 비록 이 계급의 제1선호 정당은 아니지만 말이다.

진보진영의 온건파들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도우려 할수록, 점점 더 방어할 수 없는 것을 방어해야 하는 처지가 될 것이다. 문재인인의 타협적 태도 때문에 음메기가 산 우파의 공세는 앞으로 좀 더 거세질 것이고, 온건 진보계는 이로부터 문재인 정부를 방어해야 한다는 압력에서 벗어나기 힘들게 된다.

20년 전 노동자 운동은 정리하고, 파견법 등 노동악법을 날치기한 김영삼 정부를 대중 파업으로 몰락시켰다. 하지만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대해서는 종종 모호하고 주저하며 동요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온전하게 명확한 입장을 취하면 좋을 것 같다.

김문성



▶ 2면에서 이어짐

부산·경남 지역 우체국 13곳의 집배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로도 측정에서 노동자 63퍼센트가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 수면 지표(수면의 질과 주간 졸림증, 불면증 등)도 교대 근무자들보다도 좋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 이러한 상태가 누적되면 뇌심혈관계 질환이나 잦은 사고를 낳을 수 있다. 그래서 집배 노동자들은 잦은 사고와 부상, 근골격계 증상에 시달리고 있으며, 일부는 자살 등의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이다.

무제한 노동

집배 노동자들처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가 적지 않다는 것이 오늘날 한국 노동자들의 슬픈 현실이다.

지난 5년간 매해 평균 노동자 310명이 과로사로 숨졌다. 이는 뇌심혈관계질환으로 산재 인정을 받은 사망자 수치로, 뇌심혈관계질환 산재 승인율이 22퍼센트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 과로사 문제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과로로 인한 자살도 추가되어야 한다.

장시간 노동은 과로사 이외에도, 근골격계질환, 사고 발생, 생식 기능 이상, 정신 건강 장애 등 노동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 버스 기사들의 장시간 노동과 그로 인한 졸음 운전으로 잇달아 벌어진 사고는 노동자의 건강은 물론,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정부가 장시간 노동에 대해 근로

감독을 해야 함에도, 오히려 각종 법과 제도, 행정지침으로 장시간 노동을 유발시켜 왔다.

대표적인 것이 근로기준법 59조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우편업과 운송업, 보건업 등 26개 업종)을 유지해 온 것이다. 이 업종들에선 사측이 노동자 대표와 합의만 하면 무제한 노동을 강요할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와 다수노조인 한국노총 우정노조도 무제한 연장 근무에 합의했다.

이러한 연장 근로 특례를 적용받는 사업체 수가 전체의 60퍼센트에 이르고, 종사자 수도 43퍼센트나 된다(2013년 통계청).

따라서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를 부르는 근로기준법 59조는 즉각 폐기돼야 한다. 그런데 최근 국회에선 26개 특례업종 중 16개만을 제외하는 것으로 여야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육상과 수상, 항공 등의 운송을 비롯해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은 특례업종으로 유지되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일부 축소가 아니라 완전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9월 12일 민주노총 등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노동·종교 단체들이 ‘과로사 OUT’ 공동 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각종 악법과 제도, 지침 등의 폐기를 요구하며 이를 위한 활동에 나섰다.

장시간 노동을 강요해 온 노동시간 특례업종, 잘못된 행정 지침 등을 즉각 폐기해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한다.

신정환

전교조

비정규직 교사·강사 정규직화 지지 활동 평가와 과제

정원석 전교조 조합원

9월 11일 교육부가 '교육 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한 달여간 진행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의 결론은 기가 막히게도 '정규직 전환 제로'였다. 기간제 교사와 영어회화전문 강사(영전강), 스포츠강사(스강) 등 비정규 교사·강사들은 모두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됐다. 심지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의 권고나 법원 판결에도 못 미친 것이었다.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전기련)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비정규직 제로 정책은 허울뿐인 정책이며 전국 4만 7000여 명의 기간제 교사들을 농락한 행위”라고 규탄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도 “문재인 정부는 공약 파기를 인정하고 사과하라”며 “심의위 결정구조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부는 “사회적 형평성 논란”과 “교육현장의 안정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애초부터 비정규직 교·강사를 정규직화할 의사가 없었다. 이미 7월 20일 발표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비정규직 교·강사를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비정규직 교·강사의 대폭 증가는 대표적 교육 적폐다. 이전 정부들은 재정 위기와 학령인구 감소를 핑계로 정규직 교사 증원보다 기간제 교사를 늘려 왔다. 또한 각종 비정규 강사 제도를 도입했다. 따라서 교육부의 이번 발표는 문재인 정부가 적폐 청산 의지가 부족함을 드러낸 것이다.

반대

우파 언론은 기간제 교사와 예비교사들을 이간질하며 갈등과 분열을 부추겼다. 교총도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반대 서명을 받았다. 정부는 정규직화 책임 회피에 이런 여론을 이용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중집)도 사실상 비정규직 교·강사의 정규직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결정했다. 그것도 전교조 내 좌파 의견그룹인 교찾사가 배출한 집행부하에서 이뤄진 결정이었다.

전교조 중집은 영전강과 스강에 대해 제도 폐지만 얘기할 뿐 강사들의 고용 안정을 요구하지 않았다. “고용과 처우에 관해서는 정부와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고만 했다. 비정규직 강사들의 고용 안정 문제는 그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전교조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기간제 교사들의 경우에 대해서는 ‘선별적’ 고용 안정 보장을 요구했다. 즉, 일시적인 사유로 발생하는 휴직 대체 기간제 교사(정원 내)와 상시 지속적으로 일하는 기간제 교사(정원 외)를 나누고는 후자에 대해서만 고용 안정을 보장하라는 입장이었다.



정규직·비정규직 연대 원칙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휴직 대체(83퍼센트) 기간제 교사가 정원 외 기간제 교사(17퍼센트)보다 월등히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교조의 입장은 현실에서는 대다수 기간제 교사들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기간제 교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휴직 대체와 정원 외 기간제 교사가 칼같이 분리되지 않는다. 휴직 대체의 경우에도 5년, 10년 이상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들이 수두룩하다.

교육부는 11일 발표한 방안을 각 시도교육청에 공통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강사들의 처우 개선 비용을 교육청이나 일선 학교가 떠안을 수 있어 강사들의 계약을 기피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또, 교육부가 “정원 외 기간제 교원의 해소를 위해 정규 교원의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사립학교의 경우 기간제 교원 비율을 개선하며 정규 교원 확충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정원 외 기간제 교사 자리에 정규 교사를 발령 내겠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 방침을 공립학교에 적용하면 (임용고사 합격증이 없는) 기간제 교사의 계약을 중단한다는 뜻이다. (임용고사 합격증을 요구하지 않는) 사립학교에서는 기존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 여부가 뜨거운 쟁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근무하는 비정규직 교·강사들의 정규직 전환에 찬성하지 않는 전교조 중집의 입장은 이런 현실 앞에서 무기력하거나 방관적이 될 것이다.

대의원대회

아쉽게도, 9월 2일 열렸던 전교조 대의원대회는 중집 결정을 뒤바꾸지는 못했다. 대의원 31명이 발의한 “전교조가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동의하고 그들의 투쟁에 연대하자”는 안건이 재석 247명 중 71명(30퍼센트)이 찬성해 부결됐다. 낙담이 커 일부 사람들은 ‘전교조가 보수화된 것 아니냐’, ‘전교조가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으니 이제 정규직화 지지 운동은 끝

난 것 아니냐고 말한다.

전교조 대의원들이 원칙적 입장을 채택하기를 바랐던 노동운동 활동가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은 분명 아쉽다.

그럼에도 30퍼센트의 찬성은 가능성도 보여 준 것이다. 그러나 경제 위기 심화로 교사들도 고용과 노동조건이 압박 받아 조합원들의 보수적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30퍼센트의 찬성은 지도부가 원칙적 입장을 정하고 조합원들을 설득하려고 진지하게 노력했다면 찬성 비율이 훨씬 더 높아질 수도 있었다는 뜻이다.

이제 전교조 좌파 활동가들은 30퍼센트의 대의원들과 함께 전교조 안팎에서 비정규직 교·강사의 정규직화 지지 운동을 만들어 가야 한다. 이를 위해 전교조의 좌파 활동가들이 이번에 한 구실을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전교조 내 좌파 활동가들은 대의원대회에서 중집 결정을 뒤집기 위해 공동 발의안을 준비하고 연서명을 함께 조직하는 등 공동 대응했다.

그러나 좌파들이 좀 더 일찍 개입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아마 비정규직 교·강사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입장이 분명치 않은 것이 영향을 미쳤던 것 같다.

가령, 전교조 좌파 활동가들 사이에서도 “모든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 요구는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이 적잖았다. 일부 사람들은 “전원 정규직화” 요구가 문제 해결을 오히려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고 봤다. 단계적인 정규직 전환 계획이 현실적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운동의 초기 단계부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하는 식의 논란에 빠진다면, 싸우기도 전에 운동은

갈가리 찢어지게 될 것이다. 운동이 분열하면 정규직화 요구 성취는 요원해지고, 운동 참가자들 사이에서 환멸과 냉소가 생겨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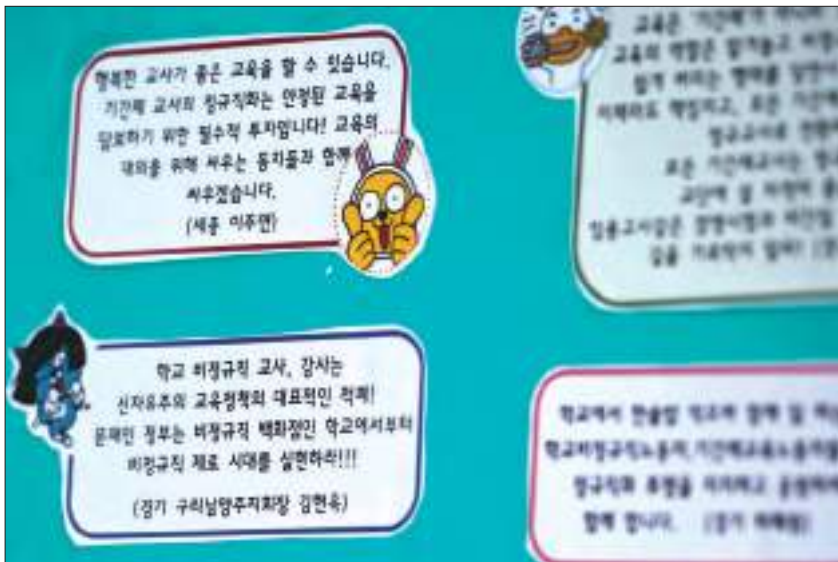
또, 비정규직 문제가 다른 부문, 다른 노동현장에서 벌어질 때는 그 요구와 투쟁을 흔쾌히 지지한다. 전교조는 그동안 비정규직 투쟁의 대의를 지지해 왔다. 많은 조합원들이 기아차노조 집행부의 비정규직 노조 분리 추진 사태를 보며 ‘저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자신의 노동현장에서 벌어지면 얘기가 달라진다. “상황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에 전교조 좌파 활동가들도 압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들은 경제 위기 시기인 오늘날 노동조합 운동에서 정치의 중요성을 보여 준다. 무엇보다, 노동계급의 단결 원칙을 자기 부문에서 확고히 지지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정치가 정말 필요하다.

교육부의 전환 심의위의 결정이 발표됐지만, 상황이 끝난 것은 아니다. 비정규직 교·강사들은 정부 발표에 분노하며 반발하고 있다.

비정규직 교·강사들이 불만이 즉각 대중 행동으로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정부 발표는 사드 배치와 거둬들인 인사 실패 등과 결합되면서 문재인 정부와 노동자들 사이에 균열이 생기고 있음을 보여 줬다.

따라서 전교조 좌파가 비정규직 교·강사 정규직화를 지지하고 그 투쟁에 연대하는 운동을 구축해 가야 한다. 그 출발로서 대의원대회에서 찬성한 71명의 대의원과 정규직화 지지 목소리를 낸 활동가들이 결집할 필요가 있다.



비정규직 교사·강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전교조 교사들의 메시지

독성 생리대

여성의 건강과 안전에 무책임한 문재인 정부

독성 생리대 사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안이한 대처로 여성들의 불안이 더욱 커지고 있다.

며칠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과학적 타당성”이 없다고 비난하던 여성환경연대의 생리대 유해 물질 실험 결과와 생리대 제품명을 돌연 공개했다.

충격이게도 유해물질이 검출된 생리대는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유명한’ 제품들이다. 그 제품들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한국 생리대 시장의 9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일부 여성들은 비싼 가격과 해외 운송비를 감수하고 유기농 재료로 만든 해외 생리대 제품을 구매한다. 그러나 대다수 여성 노동자들은 그럴 여력이 없다.

독성 생리대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임한 문재인은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황당한 책임 전가

생리대 안전성을 책임져야 할 식약처는 어설픈 꼼수로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다.

식약처는 여성환경연대 실험 결과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하다가 여론의 거센 압력에 밀려 입장을 번복했다. 그러면서 “여성환경연대의 자료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서 불신”이 생겼고, “소비자들의 지나친 우려”가 문제라고 했다.

그러나 이런 “불신”을 자아낸 주범은 그동안 여성들의 건강과 안전을 나몰라라한 식약처다.

식약처는 오랫동안 생리대 유해성 문제를 부정하며 안전성 강화 요구를 묵살해 왔다. 일회용 생리대에 접착제 등 합성화학물이 사용되는 만큼 다양한 유해 물질이 나올 가능성이 큰데도 식약처의 생리대 검사 항목은 20년 전에 정한 9개뿐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독성물질 중 상당수는 아예 검사 항목에도 없다. 오히려 식약처는 기업 활동 지원을 명분으로 안전성 심사 규정을 간소화해 왔다.

이런 식약처의 안이한 대처를 방패 삼아 최근에는 생리대 기업들이 적만



여성의 안전에 무관심한 ‘페미니스트 대통령’? 문재인 정부는 즉각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라

하장식 반격에 나서고 있다.

‘탈리안’을 만드는 ‘깨끗한 나라’는 생리대 유해물질 실험 책임자인 교수로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생리대 시장의 50퍼센트를 장악하고 있는 ‘유한킴벌리’도 여성환경연대의 실험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생리대 유해성을 부정하고 나섰다. 정작 문제가 된 유해 물질이 자사 제품에 사용됐는지, 얼마나 검출되는지는 전혀 공개하지 않으면서 말이다.

우파 언론도 가세하고 있다. 《주간조선》은 “무분별한 정보”에 의존해 국민 반응을 보이는 여성들을 문제 삼았다. 또한 ‘유한킴벌리’ 임원이 여성환경연대 이사임을 지적하며 생리대 유해성 논란이 시장 확보를 위한 기업들의 분쟁에 평범한 여성들이 놀아난 것인 양 본질을 호도했다(《주간조선》 2473호 ‘탈리안을 위한 변명’).

물론 시민단체 이사가 생리대 시장 1위 기업의 임원을 겸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많은 사람들이 식약처를 못

믿으면서도 여성환경연대의 폭로에도 일부 의구심을 느끼는 이유다. 그럼에도 어느 정도 믿을 만한 실험 결과를 제보 받은 뒤 반 년이 지나도록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식약처가 진정한 문제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논란이 커지자 식약처는 생리대 896개 품목에 대한 ‘1차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이달 말에 결과를 발표하겠다고며 부랴부랴 사태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식약처는 논란이 되는 생리대 유해 물질 104종 중 단 10종만 조사할 예정이다. 생리대 사용 피해에 대한 역학조사는 계획조차 없다. 식약처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중인 피해 사례 설문조사는 빈약하다 못해 한심하다. 피해 증상 결과 항목에는 ‘중대한 불구, 선천적 기형 초래, 생명의 위협, 사망’ 등을 점점하게 돼 있다.

식약처는 이런 제한적이고 형식적인 검사로 기업들의 짐을 덜어 주려 하는 듯하다.

그래서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생리

대 전수조사를 식약처에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민관공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실질적인 전수조사·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지당한 조치에 즉각 나서야 한다. 그뿐 아니라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독성 생리대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전폭 지원해야 한다.

안전 위협 컨트롤 타워

식약처는 식품·의약품·의약외품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제품을 폭넓게 다뤄 ‘국민 안전 컨트롤 타워’로 불린다. 하지만 식약처는 ‘멜라닌 분유’, ‘석면 베이비파우더’, ‘중금속 수산물’, ‘가습기 살균제’, ‘살충제 달걀’ 등 안전사고가 터질 때마다 무능한 대응으로 사태를 악화시켰다.

박근혜는 식약청을 식약처로 승격시키고 권한을 강화해 규제 완화 선도 부서로 만들었다. 식약처는 안전 규제

때문에 ‘불편’을 겪는 기업들의 고충 처리 업무에 주력해 왔다. 반면 안전 검사 예산은 계속 삭감됐고 안전 규제는 너털너털해졌다.

문재인은 집권 이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정부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 했다. 그러나 번지르르한 말과 달리 독성 생리대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식약처는 입법 권한도 있으므로 문재인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비교적 쉽게 생리대 유해물질 항목을 개정하고 안전 검사를 강화할 수 있다.

생리대는 여성이 보통 수십 년간 사용하는 생필품이다. 따라서 정부가 안전하고 질 좋은 생리대를 개발해 무상으로 보급해야 한다.

더 나아가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를 건설하려면 이윤 중심 체제에 도전하는 정치와 운동이 필요하다.

전주현

박근혜 의료 적폐, 고 백남기 농민 사인 은폐 …

부패한 서울대병원장 서창석은 당장 물러나라

“서명을 받다 보면 환자 보호자들이 깜짝깜짝 놀라곤 해요. ‘이 사람이 아직도 병원장이야?’ 하고 말예요.” 의료연대본부 최상덕 서울대병원분회장의 말이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서울대병원장 서창석의 근황을 듣고는 깜짝 놀란다. 서창석은 박근혜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부패한 인사들이 줄줄이 구속되는 와중에 유독 수사조차 제대로 받고 있지 않다.

서창석은 2014년 9월 대통령 주치

의로 임명됐다. 최순실 일가의 오래된 주치의인 이임순이 다리를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8월 서울 인사동에서 서창석과 전 서울대병원장 오병희, 전 청와대 수석 안종범, 보건복지부비서관 김진수가 박채윤(박근혜에게 성형 시술을 해 준 김영재의 부인)을 만났다. 이 자리에는 박채윤의 동생 박휘준도 있었다. 박채윤은 이 자리에서 서울대병원 관계자들이 안종범에게 뇌물을 건넸다고 진술했고, 이듬해 2월 박채윤은 서창석 등 서울대병원

교수에게 금품을 건넸다. 같은 달 서울대병원에서는 ‘김영재 실’을 의료재료로 등록하는 절차가 시작됐다. 박채윤은 2016년 6월 서창석이 서울대병원장에 취임한 뒤에도 150만 원가량의 선물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김영재는 2016년 7월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외래의사로 위촉됐다.

서창석은 고 백남기 농민 사인 은폐 사건 당시 병원장으로서, 명백한 외인사를 병사로 기재한 신경외과 교수 백선히의 사망진단서 발행을 묵인

했다. 병원 안팎의 거센 항의에도 이들은 한몸처럼 거짓말과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런데 이런 자가 해임되기는커녕 제대로 된 검찰 수사도 받지 않고 있다. 서울대병원장의 임명권은 대통령인 문재인에게 있는데,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안 취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장 해임 건의는 서울대 이사회가 할 수 있는데, 이사회의 구성원이자 실질적 책임자인 서울대학교 총장 성낙인도 이 문제에 침묵한다. 시흥캠퍼스 추진 철

회를 요구하던 학생들에게는 무기정학이라는 중징계를 내리면서 말이다.

여러 달째 서창석 퇴진 운동을 벌여 온 서울대병원 분회는 진보적 노동·사회 단체들과 함께 서창석 퇴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박근혜 적폐의 상징적 인물이 여전히 서울대병원장으로 남아 있다는 소식에 많은 단체들이 분노하며 공동위 참가 의사를 밝히고 있다.

서창석은 당장 물러나야 한다.

장호중

유엔 안보리, 새 대북제재 결의 채택

제재 강화는 북한 민중만 고통에 몰아넣는다

김영익

9월 1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의 섬유·의류 제품 수출을 금지하고 대북 원유·정제유 공급의 총량을 제한하는 새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이 그 명목이었다. 일각에서는 이번 결의와 기존의 유엔 대북 제재를 더하면 2016년 기준 북한 수출의 약 90퍼센트가 차단되고 북한 유류 공급의 30퍼센트가 막힐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우익 언론들은 대북 제재 강화가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라고 주장한다. 그동안 핵과 미사일 개발에 도움이 된 돈을 확실해 끊어 버리자는 얘기다.

그러나 대북 제재 강화로 인한 피해는 거의 대부분 평범한 북한 노동자들이 떠안게 될 것이다. 당장에 섬유 수출이 막힌 기업들의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생계를 위협받게 될 것이다. 유류 공급 제한에 따른 물가 인상은 노동자·서민의 삶을 압박할 것이다.

유엔 대북 제재 강화로 북한 노동자들의 해외 취업길도 크게 좁아질 것이다. 북한 노동자의 해외 고용 계약은 앞으로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규 고용이 사실상 막

히고, 기존에 고용된 북한 노동자도 계약 연장이 어려워질 것이다. 예컨대 중국에서는 북한 노동자 수만 명이 중국 노동자 임금의 절반 정도만 받고 일하며 가족을 먹여 살리고 있는데, 이마저도 앞으로 어렵게 됐다.

도대체 누구를 겨냥한 제재인가? 김정은인가, 북한의 평범한 민중인가.

대북 제재를 강화한다고 해서, 북한 핵개발 능력 향상을 억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트럼프마저도 이번 유엔 대북 제재가 얼마나 영향을 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이번 대북 결의안 초안에 경제 봉쇄 수준의 제재 계획을 제시했으나,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해 그 수위를 낮춰야 했다.

러시아 대통령 푸틴은 한·러 정상회담에서 대북 원유 공급을 중단해 달라는 문재인인의 요구를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러시아는 중국에 이어 두 번째 주요 대북 원유 공급자다. 중국도 북한에 비해 화와 압박을 가하고 있으나, 북한 경제를 완전히 봉쇄하는 것은 여전히 반대한다.

테이블 위에

트럼프 정부는 중국·러시아가 북한의 석탄 밀수출을 묵인하는 등 유엔 대북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고 불평한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번 제재는 작은 진전일 뿐, 앞으로 벌어질 일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다. 미국 재무부 차관보 마셜 빌링슬리는 대북 압박을 극대화하기 위해 중국과 공조하겠지만, 미국이 독자적으로도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무부 장관 므누신도 중국이 제재를 준수하지 않으면 “미국과 국제 달러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으르렀다.

의회를 비롯해 미국의 일부 지배자들은 중국, 러시아의 동의 여부에 연연하지 말고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라고 트럼프 정부에 촉구한다.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대형 은행들을 제재하라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 러시아를 압박하며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과 군사

행동 카드를 여전히 테이블 위에 올려 놓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트럼프의 대북 제재 강화에 적극 협력한다. 오죽하면 대선 당시 문재인을 지지했던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이 완전히 아버지처럼 돼 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을까.

청와대는 2006년 북한 1차 핵실험 직후 중국이 일시적으로 대북 원유 공급을 중단한 덕분에 이후 북한이 6차 회담에 복귀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당시 북한은 미국한테 금융제재 해제 약속을 받고 6차회담을 제시했으나, 중국과 러시아가 아니라 일시 긴장 완화가 북한으로 하여금 협상 테이블에 나오게 한 것이었다.

반대로, 제재 강화는 북한 측의 반발을 불러 더한층 긴장을 높이는 결과를 낳은 적이 더 많았다.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의 발단도 그전에 미국이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은행(BDA)의 북한 계좌를 막아 버린 일이었다.

이번에도 그러 될 수 있다. 제재 결의 직후 북한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고통을 겪게 만들 것”이라며 반발했다. 북한 외무성은 “끝을 볼 때까지 이 길을 변함없이 더 빨리 가야 하겠다”고 밝히,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을 암시했다.

전술핵

분명 군사적 옵션은 트럼프 정부에게도 위험한 선택일 것이다.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면, 적어도 동맹국 한국이 불바다가 되고 주한 미국인들이 대거 희생될 수 있다.

그럼에도 트럼프 정부는 제재 강화와 함께 대북 군사 압박 수위를 높여 가고 있다. 북한 핵실험 직후 한·미 국방장관들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한·미 연합 훈련과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배치로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트럼프 정부는 9월 초 미사일발어체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대북 대응 계획을 미



북한 수소탄 실험 직후인 7일 문재인은 경철을 소성리에 투입해 사드 발사대 배치를 강행했다

의회에 설명했다고 알려졌다.

미국 지배자들 내에서는 이번 사태를 한·미·일 삼각 협력을 더욱 더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얘기도 많다. 군사정보 공유를 넘어 한·미·일 군사훈련 강화로도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까지 미국 전술핵의 한국 재배치는 한국 우익만의 요구였다. 냉전 해체 이후 미국의 핵전략이 변하면서, 미국은 아시아에 전술핵을 배치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도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백악관이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논의했다는 보도가 나온 데 이어,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존 매케인이 전술핵 배치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으로선 북한 핵무기에 자극받아 한국과 일본에서 독자 핵무장론이 고개를 쳐들지 못하게 단속할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그에 상응하는 안전 보장 조처가 필요할지도 모른다. 지금은 ‘검토 하겠다’는 수준이지만, 나중에 전술핵 배치가 진짜 추진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다. 이러한 미국의 핵무기 전진 배치는 중국, 러시아의 반발을 부르며 핵군비

경쟁의 소용돌이를 불러올 것이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자, 문재인은 7일 아베를 만나 “미래지향적이고 실질적인 [한·일]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과거사 문제는 “안정적으로 관리”하자면서 말았다. 박근혜가 남긴 적폐인 한·일 ‘위안부’ 합의를 재검토하겠다는 공약은 어느새 흐지부지되고 있다.

문재인은 7일 경철력을 대거 동원해 사드 발사대 4기를 성주에 배치했다. 문재인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불가피했다고 강변했지만, 왜 성주 주민들이 중국과 러시아의 공

격 타격이 돼야 하는지는 말하지 않았다.

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로 성주에 배치한 후, 국방부 장관 송영무는 SM-3 요격 미사일 등을 도입해 다층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구상중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전반적인 미사일방어체계 구상에 더한층 높은 수준으로 협력하겠다는 얘기가. 그것도 고가의 미국 무기와 군사기술을 수입해서 말이다.

전술핵 재배치는 물론 이고 한·미·일의 군사력 강화와 동맹 강화는 한반도의 불안정성을 더욱더 심

화시킬 것이다. 게다가 이런 조처들은 모두 미국이 중국 등 경쟁 제국주의 국가들을 견제하려는 노력과 연동돼 있다.

지배자들은 ‘공포의 균형’으로 평화를 지키자고 하지만, 자본주의 역사에서는 그런 시도가 진짜 전쟁의 역프로 돌변한 적이 여러 번 있었다. 게다가 트럼프 집권 후 세계 자본주의 질서의 불확실성은 더욱더 커진 상태다.

“공포의 균형” 속 아슬아슬한 평화에 만족할 게 아니라, 불안정의 근원인 제국주의에 맞서야 한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서방이 부추기고 있는 동아시아·동유럽 불안정

지난주 나토 사무총장 Jens Stoltenberg는 <가디언>과 인터뷰하며 “30년 정치 인생 동안 지금보다 위험한 시기가 있었나”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이렇게 답했다. “현 시기는 이전보다 더 예측불가능하고 더 어려운 시기다. 매우 많은 도전을 동시에 받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보듯 대량살상 무기가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고, 테러리스트 문제도 있고, [곳곳에] 불안정한 데다, 러시아는 전보다 더 세게 나오고 있다. 세계는 더 위험해졌다.”

30년이라고 해 봐야 냉전의 절정기는 포함이 안 된다. 예컨대, 1962년 10월 미국과 소련은 쿠바 미사일 배치 문제로 거의 핵전쟁을 벌일 뻔했다. 훨씬 덜 알려져 있지만 비슷한 사례는 또 있다. 1983년 10월 소련 지배자들은 미국이 군사 훈련을 방자해 선제공격을 할까 봐 두려워하며, 자신들이 선수를 칠까 고려했다. 그 순간들은 심증발구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을 것이다.

스토티베르그의 현 시기 평가에는 부분적인 진실과 자신의 이해에 따른 거짓말이 섞여 있다.

현재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대립은 진정으로 무서운 일이다. 몇 년 전에만 해도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가진 국가는 미국뿐이었다.

북한 지배자들은 상당히 노골적으로 그 이유를 밝히며 미국의 핵무기 독점에 도전했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용 수소폭탄 개발에 거의 성공했다.

고립된 스탈린주의 국가 북한의 통치자 김정일은 사담 후세인이나 무아마르 카다피와 같은 최후를 피하고 싶어 한다. 이 둘은 미국이 개입해 권좌에서 제거되고 살해당했다.

“화염과 분노”

도널드 트럼프는 북한이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수차례 군사력 사용 위협을 가했다. 그러나 사실 미국이 군사력을 사용하는 쉽지 않다. 북한과 전쟁을 벌이면, 그 피해는 최소한으로 잡아도 남한의 수도 서울의 처참한 파괴이다.

최악으로는, 세계 최초의 쌍방 핵전쟁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다. 그런 전쟁이 일어나면 틀림없이 북한은 파괴될 것이다. 이런 끔찍한 시나리오가 양쪽을 억제하고 있다. 북한은 이런 종류의 판단이 큰 도박에 특히 능숙하다.

그러나 스토티베르그의 인터뷰에서 주된 초점은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그들의] 서부 국경 즉, 발트해 연안 국들 등 나토 회원국 인접 국경에서 합동 군사 훈련을 벌인 것이었다. 스토티베르그는 에스토니아에 있는 영국군 부대를 방문하는 중이었다. 이 부대는 동유럽에 배치된 나토 전후부대 4개의 일부다.

러시아 군사 훈련을 두고 스토티베르그는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장

그는 불만을 드러냈는데, 이는 서방이 러시아를 대하는 전형적이고 근시안적인 태도를 보여 준다. 이 군사 훈련이 나토의 최근 행보에 대한 대응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나토의 움직임은 러시아의 2014년 크림반도 점령에 대한 대응이고, 이는 또 나토의 지속적인 우크라이나 동남부 지역 개입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이었다.

더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이 갈등은 미국이 초래한 결과다. 소련 붕괴 후 미국은 나토를 러시아 국경 쪽으로 확장해 왔다. 그러던 중에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과 협력협정을 맺기로 결정하자,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은 서방의 포위망이 급격하게 강해질 것이라 봤다. [그래서] 푸틴은 러시아 제국주의의 힘을 “가까운 외국”[옛 소련의 일원이었던 나라들을 지칭]에 행사했다. 푸틴의 이런 행보는 역겨운 횡포였지만, 미국이 중동에서 한 짓도 못지 않다. 사탕자 수로 따지면 미국이 살해한 사람이 훨씬 더 많다.

어쨌든 스토티베르그가 말하는 “더 적극적인 러시아”가 가까운 미래에 서방과 핵전쟁을 벌일 것인가? 그렇지 않다. 미국과 러시아가 전쟁을 벌이면 양측 모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참화를 입을 것이라는 계산이 냉전 시기의 위기를 때에도 두 적 대국을 억제했다. 이는 오늘날에도 적용된다.

또한, 앞서 말한 것처럼 한반도의 갈등도 당사국들이 싸우면 처참한 결과를 낳을 것이란 사실 때문에 억제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가 있다. 제임스 클라퍼 전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지난해 CNN에 이렇게 말했다. “트럼프가 핫라인에 김정연에게 무언가 조처를 취하기로 결정하면 그를 막을 방법이 별로 없다. ... 그가 핵을 사용한다고 결정하더라도 통제 할 방법이 거의 없다. 이는 매우 무서운 일이다.”

미국의 충실한 하인 스토티베르그는 이러한 사실을 언급하지 않는다. 나머지 우리들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트럼프의 장군들이 트럼프를 잘 통제하길 기대하든가, 아니면 몇몇 개인들에게 전 인류를 파괴할 힘을 부여하는 이 체제를 무너뜨리든가.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57호 / 번역 최병현



통일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김련희 씨

김련희 씨의 북한 귀향을 허가하라

자유 왕래를 지지하라

가족이 있는 북한으로 송환해 달라고 요구해 온 탈북민 김련희 씨가 자신의 탈북 과정과 남·북한에서의 삶을 기록한 책 <나는 대구에 사는 평양시민입니다>(2017년 8월 발행)를 냈다. 그는 탈북 브로커에 속아 자신의 의사에 반해 한국으로 오게 됐다면, 평양의 가족 품으로 돌려 보내 달라고 2012년부터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그의 호소를 매물차게 무시했다. 심지어 그가 재입북할 것을 우려해 여권도 발급해 주지 않

았고, 2014년에는 ‘간첩’ 혐의로 수감하기도 했다.

문재인이 집권했어도, 김련희 씨의 처지는 나아진 게 없다. 북한 정부가 대화 재개 조건의 하나로 그의 귀환을 요구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그 요구를 묵살한 바 있다. 최근 경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김련희 씨를 수사한다고 했다.

중요한 것은 김련희 씨 본인의 의사다. 그가 브로커에 속아서 남한에 온 것인지 아닌지가 쟁점이다. 그가 남한에 와서 드러낸 친북 사상도 쟁점일 수 없다.

진보·좌파는 자유 왕래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판단해야 한다. 누구든 원하는 곳에 가서 살 자유가 있음을 옹호해야 한다.

그의 책을 보면, 김련희 씨는 중국에 사는 친척을 만나러 나왔다가 그동안 알던 간복수(간염 등의 원인으로 북부가 몰이 참가) 재발했다. 그는 평양으로 바로 돌아가지 않고 치료비를 벌겠다고 중국 현지 식당에서 일자리를 구했다. 그러다가 한국에 가면 몇 배로 더 벌어서 돌아갈 수 있다는 브로커의 말을 믿고 2011년에 한국으로 왔다.

많은 북한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국경을 넘어 탈북민이 된다. ‘무상 의료’를 제공한다는 ‘사회주의’ 북한의 한 주민이 치료비 마련을 위해 중국 땅에 주재있었다가 한국으로 오게 된 우여곡절은, 북한 체제의 모순을 보여 준다.

‘탈남’

그런데 탈북민에게는 한국에서의 삶도 매우 어렵긴 마찬가지다. 많은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서 처음 만나

기관은 간첩을 잡겠다고 가족 행위도 서슴지 않는 국정원이다. 국정원의 조사 과정을 통과해 사회로 나와도, 경찰의 감시를 받는다.

그리고 온갖 차별과 냉대가 그들에게 닥친다. 대부분이 빈곤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탈남’해 제3국으로 이주하는 탈북민들이 느는 까닭이다. 그들 중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 ‘어차피 차별과 냉대를 받을 것이라면, 같은 민족에게 받는 것보다 외국에서 아시아인으로 살면서 차별 받는 게 나을 것 같다.’ 심지어 북한으로 돌아가는 탈북민도 있다.

김련희 씨를 비롯해 남·북한과 중국 등지의 탈북민들이 처한 온갖 고난

김영익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가?

강동훈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통신 비집값 인하 정책,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비정규직 정규직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을 내놓으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라고 떠들썩하게 홍보한다. 여러 언론들에서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성공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론은 '소득일자리 증가 → 소비 증가 → 투자 증가 → 소득일자리 증가'로 성장과 분배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본다.

물론 신자유주의로 불평등이 심화된 상황에서 임금과 일자리를 늘려 노동계급의 전체 소득 몫을 늘리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임금을 올리면 성장률이 올라가면서 경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소득주도성장론에는 동의하기가 어렵다. 소득주도성장론이 경제 위기의 주된 원인을 소비 부족이라고 잘못 짚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하에서 경제 성장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대중의 소비보다는 자본가들의 투자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무리 임금을 올린다고 해도 노동자들은 생산된 상품 전체를 구입할 수 없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는 언제나 '과잉생산자'라고 지적했다. 자본가가 이윤을 다시 투자하지 않으면 상품의 일부가 팔리지 않으면서 경기침체가 벌어지게 된다.

이런 점에서 소득주도성장론은 근본적인 모순과 약점이 있다. 소득주도성장론은 단지 임금일자리 증대 정책이 아니라 소득주도'성장'론이기 때문



별 볼 일 없는 비정규직 대책과 복지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 준다

에 반드시 자본가들의 투자 확대(자본 축적)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임금 몫을 늘리는 정책은 이윤율을 압박해 자본가들의 투자를 줄이기 십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를 성장시켜야 한다는 전제(투자 확대, 자본 축적)를 받아들이게 되면 임금 인상을 억제해야 한다는 논리에 취약해져 노동운동의 발목을 잡게 될 공산이 크다.

피죄죄

그러나 당면해서 더 중요한 점은 문재인 정부가 실제 소득주도성장 정책, 즉 노동자들의 몫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와 우익 야당언론의 말잔치를 걷어내고 공정하게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은 너무 피

죄죄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진지하게 추진하고 있는지도 의문이 든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예산 총지출이 2017년의 본예산보다 7.1퍼센트(28조 5000억 원) 늘어나 대대적인 복지 예산인 것처럼 주장했으나, 실상은 내년 예산 총수입 증가분 32조 8000억 원도 다 쓰지 않는 균형재정 예산이다.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대한다며 경찰군인 선발은 늘리지만, 교사 선발 수는 대폭 줄였다.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말하지만, 학교비정규직 교사·강사는 정규직화 대상에서 아예 제외했다. 온갖 편법을 동원해 상시업무 비정규직 노동자를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례들도 폭로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자회사 고용 방안 등에서도 알

수 있듯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조차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그나마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한 비용도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내년 하위직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2.6퍼센트로 제시했는데, 예년(지난 3년) 인상률 3퍼센트대보다 낮아진 것이다.

아동수당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그 대신 인상을 약속했던 가정양육수당은 결국 동결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도 정부 지원은 거의 늘리지 않고, 건강보험료 인상과 건강보험 재정 흑자분을 사용하기로 했다. 통신비 집값 인하 정책은 기업주부자들의 반발 때문에 제대로 시작도 못 하고 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정책 대부분은 노동자들의 전체 소득 몫

을 늘리는 게 아니라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이다.

그런데 노동조합 지도자들과 개혁주의자들은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문재인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조금이라도 더 성과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새 정부와 어느 정도로 협상협력해야 하는지는 조금씩 다르지만, 비정규직 문제 해결, 산별노조와 교섭 체계 완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노조 조직을 제고, 노동자 간 격차 축소, 노조 할 권리 등을 위해 협상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 정부가 단기적으로는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 기대하면서 말이다.

그러나 앞서 봤듯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은 노동계급 전체의 소득을 올리는 게 아니라 비정규직저임금 노동자 처우 개선을 명분으로 정규직 노동자들의 양보를 이끌어 내는 데 있다.

게다가 집권 4개월밖에 안 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만은 벌써 터져 나오고 있다. 사드 배치를 밀어붙이는 것뿐 아니라 피죄죄한 비정규직 대책, 복지 정책도 공분을 사고 있다.

이런 불만을 투쟁으로 조직하는 것을 부차화하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근거 없는 기대를 부풀리거나 상층의 교섭이나 노조 내 협상 전략 마련에 치중해서는 임금과 일자리 문제든, 임금 격차 문제든 해결할 수 없다. 협상을 우선시하는 태도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를 낮춰야 한다는 압박으로 작용하거나 정규직 노동자들의 양보는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강화해, 노동운동을 혼란과 사기 저하로 이끌 수 있다. 그리고 혼란과 사기 저하는 노조 강화와 조직을 확대도 어렵게 할 것이다.

연명치료중단법안(웰다잉법) 시행은 인간답게 죽을 권리의 인정이다

웰다잉법으로 불리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이 내년 2월 4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2016년 1월 17일에 입법돼 지난달 시행됐지만, 연명치료 중단 등 핵심 결정 조항의 시행일이 6개월 연기돼 사실상 입법 후 2년이 지나야 본격 시행될 예정인 것이다.

2009년 세브란스병원에서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김 할머니 사건'은 실제 연명치료 중단 사례인데, 9년 만에 법률적 뒷받침을 받게 된 것이다. 즉, 현실과 법안 도입 시기의 간극도 상당하다.

이런 뒤늦은 법률 도입은 그동안 평범한 사람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결정할 권리가 크게 제약받아 왔음을 뜻한다. 또, 객관적으로 환자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 그 가족이나 지인들은 아무런 결정권도 갖지 못하면서 병원비 등 부양 책임만 떠맡는 가혹한 일이 반복돼 왔음을 뜻하

기도 한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고자 2007년 대선 때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가 '존엄사법' 제정을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지난 몇 년 동안 진보적 보건의료 단체와 활동가들이 웰다잉법 논의에 적극 나서지 않은 데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제대로 발휘되기 힘든 현실이 영향을 끼쳤다. 큰 치료비 부담이다.

예를 들어 환자 1명당 말기 연명치료비는 비보험치료비를 제외하고 연평균 1500만 원 정도로 알려져 있다. 대학병원 등에서 연명치료를 받는 환자들은 1억 원 이상 지출하는 일도 허다하다(건강보험공단 정책연구원 보고서).

병원비 지출 때문에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비율(재난적 의료비 가구비율)도 한국은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다. 2014년 온 가족이 사살한 '세 모녀 사건'의 직접적 원인은 이 가족의 주소득원이었던 아버지의 병원비 때문에

빈곤층으로 추락한 것이었다. 이런 현실에 비춰 보면 문재인 정부가 최근 발표한 일부 보장성 강화 조치는 미흡하기 짝이 없다.

이런 한국 의료제도의 취약성 때문에 최소한 유럽국가나 일본 같은 수준으로 의료비 부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도입되지 않는다면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하는 자기결정권이 왜곡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온 것이다.

자기결정권

그러다 보니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된 지난 7년간의 논의에서 문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현실적으로 그 결정을 대리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인 보호자의 결정권은 오히려 부차적으로 다뤄졌다. '악용' 방지 장치 마련에 대한 논의, 의료 전문가와 국가의 통제에 대한 논의가 더 많았다. 마치 평범한 사람들이 자기 부모와 자식을 간단히 포기하기라도 할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보수 우파의 이데올로기가 큰 영향을 끼친 것이다.

결국 웰다잉법에는 의료 전문가와 국가기관(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통제 권한이 명시되는 등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요소가 많이 포함됐다. 연명의료중단서, 전문의 동의, 녹취 등 의료인들의 승인이 필요하고, 연명의료관리기관이 사전연명의료의 향서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관리 감독을 하는 기능도 부여됐다.

연명치료 중단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는 환자가 자신의 죽음에 대한 결정권을 갖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보호자가 경제적 압력에서 자유롭게 온전히 환자의 권리만을 위해 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따라서 의료비 부담을 유럽 수준으로 낮추고 전국민 무상의료를 실시하면 될 일을, 전문가와 국가기관의 통제 장치 마련에 시간과 노력을 낭비한 셈이다.

보수 언론과 보수 정당은 연명치료

로 낭비되는 '비용'을 주된 화두로 삼았다. 그들이 보기에 '쓸모없게 된' 가난한 노동자들을 살려 주느라 돈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이다. 대형병원과 호스피스·요양 병원의 수익성도 고려 대상이었을 것이다. 중환자실 운영에는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러나 삶의 고통을 끝내고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권리는 다름 아닌 환자 스스로 가져야 한다. 자본과 국가 권력이 죽음의 순간과 과정마저 통제하는 것은 우리 삶의 자율성을 크게 위협한다. 따라서 아직 한국 환자들이 경제적 고려에서 벗어나 죽음을 결정하는 것이 어려운 사정이더라도 연명치료중단법을 지지하고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

국가기관의 과도한 통제를 없애고, 의료 전문가의 소견보다 환자와 보호자의 결정권을 우선순위에 두도록 해야 한다. 또, 이를 제대로 구현하려면 무상의료 같은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

혼돈의 베네수엘라

좌파는 베네수엘라 경험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나?

김준효

도널드 트럼프가 “군사 개입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대화를 거부하며, “통치에 필요한 자금줄을 끊으려 … 강력하고 신속한 경제 제재”를 가하는 나라가 북한 말고도 또 있다. 베네수엘라다.

최근 4년 동안 베네수엘라 경제는 3분의 1이 축소됐다. 최근 반 년 동안 우파 폭력으로 100명 이상 사망했다. 올해 8월 이래로, 우파 야당 주도의 국회와 친정부 인사로 구성된 제헌의회 사이의 심각한 정쟁이 끊이지 않는다. (관련 기사: ‘우익 쿠데타의 위험에 처한 베네수엘라’)

우파의 메시지는 단순하다. ‘혁명’을 운하는 좌파 정부의 말로는 혼돈일 수밖에 없다. 국가를 통치 불능 상태로 만들어서라도 질서를 수복해야 한다!

좌파는 우파의 마두로 정부 전복 시도를 규탄해야 한다. 권력을 위해서라면 노동자 민중의 삶을 파탄 내는 것도 불사하는 우파가 집권하면, 혹독한 긴축 정책으로 친서민 정책의 흔적조차 지우려 할 것이고 기층 진보 운동을 가혹하게 탄압할 것이다. 이는 가당찮게도 “민주주의”를 운운하는 트럼프 같은 자들에게나 좋은 소식일 것이다.

동시에 고(故) 우고 차베스의 “21세기 사회주의” 선언에 영감을 받은 좌파는 현실이 제기하는 질문에 진지하게 답하려 해야 한다. 십수 년 동안 ‘사회주의로의 이행’이 진행 중인 나라가 왜 이 모양인가? ‘차비스타’(차베스 지지·계승) 정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해야 할 대상인가? “21세기 사회주의”의 이상은 어떻게 실현 가능할까?

“21세기 사회주의” 이상을 실현하는 것은 자본주의 국가 기구가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투쟁으로만 가능하다.



폭력과 혼돈 '우리는 돈 때문에 이러는 것이 아니다, '마두로 옛 먹여라' 등의 문구가 적힌 방패를 든 우파 시위대가 경찰과 충돌을 준비하고 있다

‘볼리바르주의 혁명’의 급진적 측면과 한계

그런 질문에 답하려면, 차베스의 ‘볼리바르주의 혁명’이 지닌 급진적 측면과 한계를 모두 봐야 한다.

차베스는 원주민 혼혈 출신으로 대령에까지 진급한 인물로, 1992년에 기성 정치의 부패에 환멸을 느낀 일군의 청년 장교들을 이끌고 군사 쿠데타를 시도해 유명해졌다. 그 쿠데타는 실패했지만 “아직은” 끝이 아니라는 차베스의 짧은 연설은, 그로부터 3년 전에 반긴축 민중 봉기 ‘카라카소’를 일으켰지만 사흘 만에 1천여 명이 학살당해 분루를 삼켜야 했던 노동자·빈민의 심정을 대변했다.

그로부터 6년 후 차베스는 압도적 지지로 대통령에 선출돼 개헌을 도모했다. 그 개헌은 ‘볼리바르주의 혁명’을 선언했지만 본질은 노동자 국제 혁명이 아니라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였다. 새 헌법은 파업권을 옹호했지만 대통령이 임의로 파업을 금지할 권한도 보장했다. 차베스는 신자유주의를 비난하며 국영 석유기업 페데베사 PDVSA 민영화를 중단했지만, 노동

유연화 전략에는 도전하지 않았다. 그러나 자본가들과 우파는 이조차 마땅찮아 차베스 정부를 전복하려 들었다.

‘볼리바르주의 혁명’은 이 쿠데타를 저지한 아래로부터의 대중 투쟁 덕분에 급진화했다. 2002년 봄 우파 주도 군사 쿠데타를 저지한 수십만 대중 시위는 우파는 물론이거니와 차베스도 예상하지 않은 것이었다. 같은 해 말 세 달에 걸친 베네수엘라 자본가들의 경제 마비 시도를 좌절시킨 것 역시 노동자들이 스스로 석유 공장을 가동하고 물자 유통과 분배를 조직한 덕이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기존의 어용 노총을 대신할 민주적 노총 UNT를 건설했다. 그리고 이런 운동의 영향으로 차베스도 급진화했다.

이후 몇 년 동안 ‘볼리바르주의 혁명’은 전성기를 구가했다. 차베스는 노동자 민중이 주도하는 대규모 사회 복지 정책 ‘미션’을 발족했다. 새 헌법이 보장하는 주민자치위원회도 이 시기에 가장 성행해, 전국적 대중 참여의 가능성을 실험하기도 했다. 화룡점점을 찍

듯, 차베스는 UNT가 주최한 2005년 메이데이 집회에서 “베네수엘라가 ‘21세기 사회주의’로 나아가고 있다”고 선언했다.

체제에 도전하지 않은 ‘혁명’

그러나 차베스의 “21세기 사회주의”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 근본적으로 도전하지는 않았다. 자본가들의 소유·통제권은 보장받았고, 고유가 덕에 사적 자본의 규모가 외려 커졌다. 일각에서 ‘사회주의적’ 조치로 찬양받은 국유화는 경영 위기에 처한 기업을 그나마도 국가가 제값 치르고 인수하는 수준이었고, 2002년 말 노동자들이 시행했던 생산시설 직접 운영은 재현되지 않았다. 석유 산업에 대한 노동자 통제를 늘리자는 요구는 차베스 자신에 의해 가로막혔다.

이 ‘혁명’은 자본주의 국가에도 도전하지 않았다. 우파 양당의 입김 하에 있던 기존 국가 관료층은 약화했지만, 국가는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재구성됐다. 국가 기구의 규모는 차베스 집권기에

네 배로 늘었는데, 그 자리를 채운 부패한 기회주의자 계층을 일컫는 ‘볼리부르게스’(볼리바르주의 혁명으로 탄생한 자본가들)라는 신조어가 생길 지경이었다. 한편 대중과는 하등 연관 맺은 바 없는 군 장성들의 영향력이 점차 늘어, 오늘날 내각의 절반을 군 출신이 차지하게 됐다.

차베스는 이런 장애물들을 우회하려 했다. 피델 카스트로의 쿠바 공산당(관련 기사: ‘쿠바 혁명 — 진정한 변화를 위한 교훈’)을 모델로 차베스가 창당한 베네수엘라통합사회주의당PSUV는 그 안에 온갖 관료와 자본가와 ‘볼리부르게스’가 뒤섞여, 혁명을 전진시키는 노동자 투쟁 정당이 아니라 철저한 통제 하에 위로부터의 지시를 전달하는 기구가 됐다.

1789년 프랑스 혁명의 지도자 생쥬스트는 “혁명을 절반만 성공시키는 것은 자기 무덤을 파는 일”이라 했다. 2000년대 초 베네수엘라에서는 “성공”의 잠재력이 훔겼 보였지만, ‘볼리바르주의 혁명’은 충분히 나아가지 못했다.

위기의 베네수엘라 — 국가 권력이 아니라 노동자 투쟁이 돌파구다

세계경제 위기로 석유 수출 수익이 줄어들면서 베네수엘라는 잇달아 문제에 직면했다. 기층의 현신에도 ‘미션’은 좌초되기 일쑤였다. ‘볼리부르게스’와 국가 관료들은 공공연히 착복을 일삼았다. 노동자 서민의 생활 개선을 위한 산업 다각화 시도는 완전히 좌절돼, 석유 의존도는 차베스 집권 이전보다도 높아졌다.

노동자 대중의 환멸과 좌절감이 커졌다. 차베스 생전에는 그 특유의 친화력 덕에 개인 지지는 유지되지만 여당 지지는 하락하는 패턴이 반복됐다. 이런 추세는 차베스 사망 후 우파의 총선

대승으로까지 이어졌다. (관련 기사: ‘베네수엘라 총선: 왜 ‘볼리바르식 혁명’이 의회 다수당 자리를 잃었는가?’)

차베스를 계승한 마두로는 한편으로는 (타협 의사가 전혀 없는) 우파와 타협을 시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래로부터 투쟁 고무가 아니라) 위로부터 통제를 강화하려 했다.

마두로는 생필품 품귀 현상을 조장한 “경제 전범” 명단을 공개하지 말아달라는 자본가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착복된 생필품을 배분하려 물류 창고를 점거한 노동자 파업은 중단시켰다. “거리의 정부”라는 미사여구는

경제 위기의 고통을 ‘혁명 의지’로 극복하라는 독촉이 됐다.

상황이 악화하자 마두로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 그 공격 대상에는 우파만이 아니라 노동자 조직도 포함됐다. 마두로는 지방선거를 유예하면서 노동조합 선거도 유예시켰다. 2015년에 PSUV와 결별한 혁명적 사회주의 단체 ‘사회주의 물결’(Marea Socialista) 사무실을 경찰이 습격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올해 7월 말 제헌의회 소집의 합헌성을 강조하며 이를 혁명의 견재함으로 풀이하기도 한다. 그러나

마두로의 제헌의회는 PSUV의 위로부터 통제 하에 구성됐다는 점에서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 열망을 자극했던 1999년 차베스의 제헌의회와는 공통점이 별로 없다. 또, 노동자 대중의 ‘적폐 청산’ 염원을 대변하려 하기보다는 우파 야당 주도의 의회를 우회해 마두로의 통치권 강화에 활용되는 측면이 크다.

한편 마두로 정부는 군부에 대한 의존을 늘려가고 있다. 일례로, 이번 제헌의회로 마두로가 관철하려는 열대우림 지역 개발 계획은 (차베스 제거 쿠데타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캐나다계 다국적기업과 군부가 합작해

주도할 것이라 알려지고 있다. 이런 민·관 합작 개발과 해외 투자 장려로 ‘볼리부르게스’들에게까지 만연한 부패를 일소하고 민생을 회생시킬 수 있을까? 더구나, 자본주의 억압 기구인 군부에 대한 의존 심화가 부메랑이 돼 돌아올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역사가 보여 주듯, 베네수엘라에서 우파를 저지하고 “21세기 사회주의” 이상을 실현하는 것은 자본주의 국가 기구가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투쟁으로만 가능하다. 좌파가 노동자 투쟁을 고무하고 혁명적 정치를 벌일 조직을 독립적으로 건설할 이유다.



서평 | 레온 트로츠키 외, 《그들의 윤리, 우리의 윤리》

인간 해방과 노동계급 자력해방 사상에 기초한 마르크스주의 윤리

최일봉

트로츠키의 《그들의 윤리, 우리의 윤리》는 군자인 체하는 자유주의자들의 윤리를 혁명적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날카롭게 비판한 저작이다. 이 책이 쓰여진 때는 모스크바 재판이 한창이던 1938년, 스탈린 체제의 끔찍한 실상이 일부 드러나던 때였다. 1936년부터 시작된 모스크바 재판은 스탈린의 유혈 숙청을 정당화하기 위한 여론 조작용 재판이었다. 당시에 자유주의자들은 스페인과 프랑스, 미국 등지의 혁명이나 계급투쟁 분출에도 불구하고 마르크스주의 쪽으로 좌경화하기는커녕 오히려 꾸준히 우경화하고 있었다. 그들의 우경화는 1950년대에는 우르르 몰려가는 수준으로 가속된다.

트로츠키는 1930년대 내내 스탈린 체제의 참상을 좌파에 경고하면서 십년 동안 홀로 싸웠다. 그는 무시당하고, 매도당하고, 심지어 망명하는 나라마다 따라다니는 소련 보안경찰의 괴롭힘을 당했다. 그도 잘 알고 때로는 자기 저작에서 언급했듯이, 스탈린이 보내는 히트맨(암살자)들이 그를 바짝 추격하고 있었다. 결국 1940년 그는 그런 암살자의 하나이자 당시 소련 보안경찰 NKVD(내무인민위원회) 요원 라몬 메르카데르에 의해 멕시코 망명지에서 살해당한다.

당시 서구 자유주의자들은 자기 국가가 소련과 동맹 관계를 맺고 있었으므로 스탈린과 소련 체제의 만행을 모르는 척하고 있었다. 1934년 가을부터 냉전 시작 때까지 약 12년 동안 스탈린의 소련공산당과 각국 공산당들은 인민전선이라는 이름의 정책을 추구했는데, 이 정책에 따르면 전 세계의 공산당들은 소련의 민간외교 사절이나 소련의 국경수비대 구실을 해야 했다. 자유주의자들은 공산주의자들을 처음에 약간 경계하다가 이내 우호적으로 대했고, 소련을 외교상의 우방으로 여겼다. 이제 트로츠키가 파에 굶주렸거나 정신 나간 몽상가로 여겨졌고, 스탈린보다 더 사악한 인물 취급을 받았다. 사실, 레닌과 함께 10월혁명을 이끈 게 트로츠키였고 혁명 직후 내전에서 적군 사령관으로 활약한 게 트로츠키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반응은 예측할 수 있는 것이었다.

트로츠키는 《그들의 윤리, 우리의 윤리》에서 볼셰비키가 '비윤리적'이라는 자유주의 지식인들의 비난을 논박한다. 그는 먼저, 이들의 설교가 이들의 중간계급 기반과 관계있다고 지적한다. 중간계급은 지배계급과 노동계급의 투쟁의 본질에 관해 진정으로 인식하는 게 별로 없다 보니 양비론을 취하기 십상이다. 특히 '국민'이나 '시민' 운운하며 계급간 충돌의 역할을 무디게 만들려고 애쓴다. 그러면서 위대한 역사적 운동에 대한 무지, 본질적으로 보수적인 사고, 우쭐해 하면서도 웅중



러시아 혁명가 레온 트로츠키 그는 군자인 체하는 자유주의자들의 윤리를 날카롭게 비판했다



그들의 윤리, 우리의 윤리

레온 트로츠키 외 지음 | 최일봉 편저
책갈피 | 10,000원

함, 정치적 비겁함 등의 모습을 보인다. 또한 연구실과 도서관의 학술 서적과 학술지, 상식 등과 함께 평화를 누리도록 역사가 자기들을 그냥 놔두기를 바란다. 1920~30년대 같은 격동기에는 그게 거의 불가능한데도 말이다. 혁명과 반동 사이에서, 차르 체제와 볼셰비키 체제 사이에서, 사회주의와 파시즘 사이에서, 스탈린주의와 트로츠키주의 사이에서 친중간계급 자유주의자들은 생각이 짜증스러울 정도로 자주 바뀌고 흔들리면서 둘 다 똑같다며 당혹해 한다.

자유주의 지식인들의 비난은 볼셰비키가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예수회의 악명 높은 금언을 따르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트로츠키의 논박은 여러 측면으로 제기됐는데, 그중 하나는 역사적 비방에 맞서 예수회를 (다소 농담조로) 변호하는 것이었

다. 목적이 수단을 규정하는 것은 맞다. 트로츠키는 당시에 잘 알려진 테러 사건을 예로 든다. 1938년 한 유대인 청년의 나치 외교관 암살 사건이 그것이었다. 이 사건을 윤리적 측면에서 비난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 암살로 제3제국은 전혀 약화되지 않았다. 사실 그 사건을 계기로 나치는 그해 11월 9~10일 독일 전역에서 유대인 대학살을 자행했다(이른바 Kristallnacht, 즉 “깨진 유리 밤”). 이 사건들은 개별적 테러가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일은 아닐지라도 정치적 효과는 없거나 아니면 아예 역효과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한편 마르크스주의의 목적은 노동계급의 승리와 이를 통한 인간 해방이다. 따라서 목적은 수단을 규정한다. 즉, 노동계급의 해방은 스스로 이루어야 한다.

보편 윤리?

트로츠키는 친자본주의 윤리학도 비판한다. 그는 윤리적 딜레마에 빠져 본 사람이라면 낮익은 이슈들을 다룬다. 가령 심계명이나 칸트가 말한 “지상 명령” 또는 “양심의 절대 무조건적 도덕률” 같은 보편적인 도덕률을 우리가 따르려 한다면 명백한 문제들에 부딪히게 된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옳은 말인 듯하지만 정당방위라면 애기가 달라진다. 또한 1980년 5월 광주항쟁의 시민군은 살인자들이 아니었다. 이렇게 무조건성·절대성이 통하지 않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보편 윤리를 받아들이는 까닭은 계급 지배를 정당화하는 전통의 일부로서 그런 관념을 물려받았기 때문이다. 살인하지 말라

는 명령은 피지배자들을 향한 것이다. 아프가니스탄에 병력을 증파하고 한반도 주변에서 군사주의 경쟁을 벌이고 있는 제국주의자들을 향한 것은 아니다.

무조건적·절대적 도덕률보다 그럴듯하게 들리는 것으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표어로 요약되는 공리주의 윤리가 있다. 벤담의 공리주의 윤리는 에릭 홉스봄이 말한 “이중 혁명,” 즉 프랑스 혁명 및 산업혁명과 동시대 산물이다. 그래서인지 무조건적·절대적 도덕률보다 덜 이상론적으로 느껴진다. 하지만 자본가 계급은 19세기 초에 리카도의 노동가치론과 함께 공리주의도 버리고 다시 종교와 그 절대적 도덕으로 돌아갔다. 물론 공리주의도 사고의 출발점을 개인으로 잡는다. 그렇다면, 수많은 개인들의 행동 각각에서 비롯하는 인과 사슬을 대체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 진부한 사례를 들면, 물에 빠진 아이를 구했는데 개가 나중에 연쇄살인범이 될 줄 어떻게 알겠는가?

벤담이 보기에, 행동의 결과들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보다 ‘더 우월한’ 소수 지배계급의 몫이다. 그리고 그들이 소유한 공장은 전 인류에 좋은 것이다. 트로츠키는 공리주의가 말하는 ‘최대 행복’은 실제로는 다수가 아니라 소수를 위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공리주의 윤리의 사각지대는 벤담 자신에게도 천대를 받았다. 가령 재소자들을 위해 그가 한 일은 교도소들을 설계한 것이었다.

계속해서 트로츠키는 이렇게 주장한다. 그런 체제는 강제력만으로는 유

지되지 못한다. 도덕이라는 접착제가 필요하다. 이를 생산하는 것이 바로 도학자(道學者)와 윤리학자들이다. 이들은 모든 무지갯빛을 가지고 놀지만, 결국 계급 사회에 행복하라고 전도한다. 그러나 도학과 윤리학으로는 역사 속에서 작용해 온 힘들을 분석하고 사회 전체를 이해할 수 없다. 사회를 명확하게 알아야 비로소 사회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방향과 사회가 장차 달리 나갈 수도 있는 방향을 이해할 수 있다. 역사를 돌아보면, 지배자들에 의한 천대와 억압이 있었음을 알 수 있지만, 계급들 간의 투쟁이 끊이지 않고 일어났음도 알 수 있다. 특히, 지금 자본주의를 지배하는 자들도 과거엔 자본주의 이전 사회의 지배자들과 생사를 건 쟁투를 벌인 적도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자본주의 체제는 옛날부터 있던 게 아니거니와 영구히 존속할 것도 아니라는 뜻이다.

이러한 역사 전개 방향과 가능성을 아는 마르크스주의자들에게는 목적과 목표가 있다. 인간 해방과 노동계급 자력해방 말이다. 이를 성취하기 위한 수단은 마련돼야 하는데, 바로 혁명적 사회주의의 정당이다. ‘그들의’ 윤리와 대비되는 ‘우리의’ 윤리는 이 과제로부터 도출된다. 만일 어떤 행동이 이 과제를 방해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윤리적이지 못한 것이다.

계급투쟁

방해한다고까지 말할 수는 없어도 사회주의 운동과 경쟁하는 운동 또는 행동이 있다.(경쟁 관계이므로 때때로 방해하기도 한다.) 테러는 노동계급을 대체한 소수 정예가 개인들을 타깃으로 삼고 모의를 통해 조직하는 군사 행동이다. 개혁주의는 노조 지도자들이 배출한 소수 의원들이 노동계급을 대신해서 하는 개혁 입법 운동이다. 스탈린주의는 지배 국가관료의 정당인 공산당이 노동계급을 대표한다고 자처하며 노동계급을 억압·착취하는 사회 체제 또는 그 체제를 방어하는 운동이다.

이 상이한 세력들에는 자기 나름의 윤리가 있다. 마르크스주의 윤리와는 일부 공통되기도 하고 일부 상반되기도 한다. 트로츠키는 이 경쟁 윤리들 가운데 특히 자유주의자들의 윤리를 주로 다룬다. 그런데 트로츠키의 시대와 달리 오늘날 개혁주의(주류파)의 윤리는 자유주의적 윤리와 그다지 다르지 않다. 트로츠키의 이 책은 흔히 개혁주의 세력과 함께 공동 활동을 하면서도 개혁주의적 실천에 종종 반대해야 하는 사회주의자들에게 훌륭한 분석 도구이자 행위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편저자는 이 책과 함께 다른 몇몇 글들도 함께 묶어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했다. 이 책이 연대의 원칙과 윤리가 확립되는 데 일조하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이다.

《오늘날 한국의 노동계급》 서평

고전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한국의 노동계급을 분석하다

최영준

한국 노동계급은 1987년 7~8월 대중파업을 통해 자신들이 “자본주의 무덤을 파는 사람들”(마르크스)이라는 특별한 존재임을 널리 알렸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났다. 이 기간에 한국은 신자유주의가 지배적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이로 인해 노동계급이 축소되고 파편화되고 이질화돼 마르크스가 말한 노동계급은 사라졌다는 주장이 상식처럼 돼 버렸다.

노동운동 활동가 사이에는 ‘1987년 투쟁의 주축이었던 대기업 정규직은 오늘날 노동운동의 결집돌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다. 심지어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 착취로 득을 본다거나, 신자유주의와 기술 발전으로 정규직은 사라지고 노동자들이 일회용 신세의 불안정한 노동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식으로 현실을 묘사한다.

노동자연대 운영위원이자 조직노동운동팀장인 김하영이 쓴 《오늘날 한국의 노동계급》은 노동운동 안에서 이처럼 상식처럼 퍼져 있는 노동계급 약화론을 고전적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논박한다. 특히 고전적 마르크스주의를 적용해 지난 30년간 한국의 계급 구조와 그 변화, 자본주의 변화에 따른 노동계급의 조건 변화와 그것이 노동운동에 미친 영향 등을 제시한다. 무엇보다 고전적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최초로 오늘날 한국의 노동계급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이 책의 출간은 더욱 값지다.

저자와 함께 동시대의 중요한 계급 투쟁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나로서는 그녀의 탁월한 이론적 능력과 이를 적용해 현실을 분석하고 전술을 내놓는 것에 감탄해 왔다. 이 책을 읽으면 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노동계급의 잠재력

이 책은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뉜다. 전반부는 마르크스의 계급론과 베버, 라이트 등 여러 논자들의 계급론을 다루며 왜 고전적 마르크스주의 계급론이 현재의 계급구조를 분석하는데 더 적절한지 입증한다.

저자는 마르크스의 계급 개념은 착취 관계 속에서 발휘되는 집단적 힘을 부각한다고 말한다. “자본주의가 노동자들을 집합적으로 조직하고 착취한다는 사실은 노동자들에게 막대한 집합적 힘을 준다.” “이 집합적 힘은 공장이나 사무실, 교통 시스템 등 생산을 멈추는 데도 사용할 수 있고 생산을 노동자들 자신을 위해 조직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다.”(66쪽)

1987년 대중파업뿐 아니라 지난 30년간 한국의 노동계급은 이런 집합적 힘을 수십 차례 보여줬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노동계급을 특별한 존재로 봤다. 하지만 일부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자본주의가 변화·발전하면서 노동계급도 변했고, 개념 규정도 달리 해야 한다고 제기한다.

우리 나라 진보·좌파 지식인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마르크스주의 역사가 에드워드 파머 톰슨은 계급을 물질적 조건보다 의식으로 정의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는 “혁명적 정치에 무관심한 노동계급의 현재 의식을 보면서 그 잠재력”을 부정하는 것으로 이끌린다.

육체노동자들만을 노동계급으로 봤던 니코스 폴란차스는 평범한 사무·전문기술직 노동자들을 노동계급에서 제외시킨다. 폴란차스의 개념으로 보면, 간호사, 교사, 공무원,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노동계급이 아니다.

이는 막스 베버의 계급론도 마찬가지다. 베버는 계급을 생산수단 지배 여부가 아니라 다양한 경제적 요인(기술,

교육, 면허증 보유 등)으로 구분했고, 평범한 사무·전문기술직 노동자들을 신중간계급으로 분류한다. 후대 베버주의자들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를 다른 신분으로 규정해 노동계급 내 이질성이 커지고 파편화됐다고 주장한다.

마르크스주의자인 에릭 올린 라이트는 사무직 노동자를 모두 ‘신중간계급’으로 규정하는 것을 비판했다. 그러나 그는 간호사, 교사는 여전히 신중간계급으로 봤을 뿐 아니라 국영기업 경영자와 국가 관료 등도 같은 신중간계급으로 분류했다.

이런 분석이 뜻하는 바는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노동계급은 줄어들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계급과의 동맹이 필요하다는 민주주의와 스탈린주의 인민전선 전략으로 나아간다. 이는 노동계급의 힘과 잠재력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 하지만 이런 분석은 한국 노동계급의 실제 변화 과정과도 맞지 않는다.

한국 자본주의는 전통적 중간계급이 점점 노동계급으로 편입돼 왔고, 마르크스가 말한 계급 양극화가 분명해져 왔다. 물론 다른 선진국보다 자영업자 비중이 높지만 2000년 이래 자영업자도 감소 추세다(131쪽). 결국 농민과 도시 자영업자 숫자가 꽤 컸던 20~30년 전과 달리 오늘날 한국 사회는 노동계급이 압도 다수가 됐다(158쪽). 계급투쟁이 일어나면 중간계급은 양대 계급 중 어느 한쪽으로 이끌릴 수밖에 없다.

노동의 변화

책의 후반부는 고전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한국 사회의 계급 구조를 분석하고 지난 30년간 한국 노동계급에 일어난 변화와 변화의 진정한 의미를 짚어 내며 여전히 노동계급이 사회변혁의 주체임을 제시한다. 또한 변화의 의미를 왜곡·과장하는 개혁주의자들의 논지를 반박한다.

저자는 지난 30년간 한국 노동운동 안에서 유행처럼 제기돼 왔던 주요 쟁점인 ‘제조업 육체 노동자들은 쇠퇴했는가’, ‘서비스 노동자 증가로 노동계급은 약화됐는가’, ‘기업의 해외 진출이 임금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 ‘비정규직 증가, 생산의 외주화와 유연 노동으로 노동계급은 분절되고 이질화됐는가’ 등을 마르크스주의적 분석을 이용해 답하고 있다. 한국의 구체적 현실

에 관한 자료와 사례들을 폭넓게 이용해서 더욱 생생하게 다가온다.

한국은 1990년대 말 이후 ‘탈산업화론’이 일종의 상식처럼 퍼졌고,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산업이 이동하면서 노동이 거대하게 변했다고 흔히들 말한다. 하지만 제조업 고용의 감소와 제조업 자체의 쇠퇴를 혼동하면 안 된다. 국내총생산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증가했다.(171쪽)

“20년 전보다 더 적은 인원으로 훨씬 더 많은 상품을 생산해 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 제조업 고용 비중의 감소가 제조업 쇠퇴의 결과가 아니라 제조업의 노동생산성 향상에 따른 것임을 뜻한다.”(175쪽) 1987년과 마찬가지로 제조업 노동자들은 여전히 중요하고 강력하다.

한편 서비스업의 성장은 제조업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성장했다. 게다가 임금과 노동조건을 보면 서비스 노동자들의 상당수는 육체 노동자들이다(193쪽). 또 제조업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집단적으로 모여 있고, 표준화된 노동을 한다(199쪽). 이는 한국 사회의 계급구조가 다층화·파편화했다는 주장과 다른 그림이다.

무엇보다 서비스업의 성장은 1990년대 이후 서비스 노동자들의 비중과 힘을 보여 주는 것이고, 이 부문에서 여성 고용이 늘면서 노동계급의 새로운 부대가 확대되고 있다(206쪽). 마르크스가 말한 노동계급의 집단적 힘과 잠재력은 거듭 증가해 온 것이다.

대다수 언론과 진보·좌파들은 한국의 비정규직 증가 추세도 과장한다. 물론 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의 비정규직 비중이 가장 빠르게 커졌다. 하지만 2000년 이래 비정규직 비중은 대략 50퍼센트를 유지하고 있다. 비정규직이 무한정 늘고 있는 것은 아니다(268쪽). 따라서 고용 불안정성을 과장하면 안 된다. 노동자들은 이제 언제든 쓰다 버리는 “일회용” 신세가 됐다는 식의 주장은 과장일 뿐 아니라 사실도 아니다. 대개 불안정성에 관한 주장은 사회의 가장 취약한 집단을 출발점으로 삼아 성급하게 일반화해 버린다. 이는 신자유주의 폐해를 강조하려다 노동계급이 더는 신자유주의에 맞설 힘을 잃었다고 주장하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289쪽)

무엇보다 비정규직 추세에 대한 과장은 노동계급 내부의 양극화를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통해 정규직의 호조건은 비정규직이 희생한 대가인 것처럼 왜곡한다. 하지만 대기업 노동자들의 상대적 고임금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희생의 대가가 아니라 노동생산성 증대에 따른 비용 절감 덕분이자 저항의 대가이다.(333쪽)

따라서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투쟁은 “승리하는 순간 패배하는 것”(박태주 교수)이라든지 “성공의 역

설”(〈한겨레〉) 같은 냉소적 태도야말로 노동계급 내 단결을 저해한다(338쪽). 개혁주의자들이 대안으로 내놓는 정규직 양보론은 “정규직 노동자들을 위축”시키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부와 기업주들의 공세에 일관되게 맞서 싸울” 주체가 아니라 시혜의 대상으로 보게 만든다.(341쪽)

혁명적 좌파

신자유주의에 따라 계급 구조가 바뀌었다는 주장의 대표적 사례이자, 불안정 노동 증대와 관련해 최근 주목받는 것은 ‘프레카리아트론’이다. 프레카리아트론은 노동계급 일부의 처지가 비교적 열악해졌다는 사실을 단순히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계급과 이해관계가 전혀 다른 새 계급이 탄생했다는 주장이다. 프레카리아트론의 선구자인 가이 스탠딩은 불안정 노동자층을 크게 과장하고 노동계급의 다른 부문과 대립시켜 노동계급 내부의 분열을 조장한다.

이런 주장을 수용하면 결국 프레카리아트에 해당하는 노동자들과 기존 정규직 노동자들 사이에 단결을 도모하는 것을 거부하게 된다.

이는 앞서 제기한 개혁주의적 대안인 정규직 양보론을 강화해 주고 개혁주의적 노동조합 관료층의 상층 협상 추구를 강화하게 된다.(388쪽)

일부 좌파들은 대기업 정규직 조직 노동자들과 단절하고 불안정 노동자들을 사회 변혁의 주체인 양 부각시키거나, 좌파 노조 지도부 세우기 등을 대안으로 삼기도 한다. 또, 노동조합 관료주의를 이해하지 못한 좌파들은 ‘사회운동적 노조주의’ 등으로 대안을 삼기도 한다.

이런 모든 주장과 대안들에는 노동계급의 힘과 잠재력이 줄어들었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의 노동계급》은 30년간 노동의 변화 속에도 노동계급이 견제함과 함께 그 잠재력은 더 커졌음을 보여 준다.

현실과도 맞지 않는 노동계급에 대한 왜곡·과장이 많은 사람들에게 반아들여지는 것은 지배자들의 이간질 탓과, 무엇보다 개혁주의적 대안에 효과적으로 맞서는 혁명적 좌파가 아직 충분히 강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 책은 한국에서 혁명적 좌파가 성장하는 데서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

저자는 이 책의 목적을 “노동계급 잠재력에 대한 확고한 이해 속에서 그것을 현실화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고 밝힌다. 이 책은 원칙 있는 주장과 계급의 단결을 위한 활동에 길잡이 구실을 것이다. 또, 자본주의가 노동자들에게 강요하는 파편화와 분열, 계급의식의 불균등을 극복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김하영 지음 | 책갈피 | 456쪽 | 16,000원



언론 적폐 주범들 물러나라 MBC·KBS 파업 승리하십시오

MBC, KBS 노동자들이 동시에 파업에 돌입한 지 열흘이 넘었다. 전국 언론노조 MBC본부와 KBS세노조는 매일 집회를 열고 거리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

MBC는 송출 인력도 파업에 참가하면서 방송 광고 송출이 중단됐다. 예능 프로그램들은 예전 방송을 재방하고,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는 지역 자체 뉴스가 방송되지 않고 있다. KBS도 이미 상당수 프로그램이 축소·결방되고 있다.

두 방송사한테 청와대의 입이 되라고 강요해 온 자유한국당과 사장, 이사진들은 연일 파업을 비난한다. 최근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의 워크숍 자료집에서 노동자 파업을 선포하는 표현이 나왔으며 언론 장악 음모가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노동자들이 단지 민주당의 지시대로 싸움에 나선 양 폄하한 것이다(물론 민주당을 공정언론 수호자로 여겨선 안 된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낙하산 사장 문제가 있었던 것에서 보듯이 말이다). 자유당은 MBC 사장 김장겸 체포 영장 발부에 반발해 김장겸 사수대를 자처한다.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간 언론 장악에 앞장선 온 자들의 후안무치가 극에 달한다.

더군다나 국정원이 방송 출연자들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활용했다는 것도 폭로됐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은 박근혜의 기소 혐의에도 포함됐는데, 집권당이었던 자유당이 이를 몰랐을 리 만무하다.

이정현의 'KBS 세월호 보도 외압'이 폭로됐을 때도 자유당의 전신 새누리당은 이를 홍보수석의 일상적 업무라며 옹호했다. 전(前) 청와대 민정수석 김영한의 업무수첩에는 청와대가 2014년 세월호 참사 후 수석비서관 회의 등에서 KBS 사장 선임과 이사장 선출 등을 논의하며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고스



정권 맞춤 방송 더는 안 된다 9월 8일 KBS·MBC 파업 공동출정식

란히 담겨 있다.

2016년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언론 자유지수에서 한국은 180개 나라 중 70위를 했다. 이 나라 언론 노동자들의 보도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보여 준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앓던 사장들은 방송을 기꺼이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시켰다. 그래서 지난 박근혜 퇴진 운동 때 두 방송사는 "공범"이라고 지탄받았다. 오랫동안 정권은 보도의 성역으로 취급됐고, 많은 진실들이 감춰졌다. 박근혜 퇴진 운동의 도화선이 됐던 비선 실세 폭로는 사실 <세계일보>의 보도로 이미 힐끗 드러났지만 더 확대되지는 않았다. 그래서 퇴진 운동 참가자들은 주류 언론의 침묵 속에서 정권의 부패가 가려질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9월 8일 파업 지지 집회에서 세월호 참사 유가족 유경근 씨는 대부분 언론이 세월호에 대해 "정부의 이야기를 사실 확인도 없이 그대로 받아냈[었다]" 하고 비판했다. 전원 구조 오보는 물론이고, 해경이 구조에 열심인 것처럼 보도하고, 진실 규명을 요구할 때 사망보험금을 보도하는 등 세월호 유가족들을 고통스럽게 했다고 지적했다. 두 방송사 기자들도 예외가 아니었다고 쓴소리를 했다.

MBC는 박근혜 퇴진 운동이 타오를 때조차 최순실의 '태블릿PC'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박근혜 비호에 끝까지 열심이었다. 박근혜가 탄핵됐는데도 탄핵을 다른 특별 다큐멘터리가 불방됐다. "남은 게 MBC뿐"이라는 홍준표의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그뿐 아니라 MBC에서는 진주의료원 폐쇄나 이마트 부당노동행위, 두산중공업 대량

"희망퇴직" 보도도 가로막혔다. "계급 투쟁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식량자원 양극화 문제도 다루지 못했다.

낙하산 사장들은 노동자 통제에도 열을 올렸다. 파업에서 핵심 구실을 했던 조합원들을 해직시켰을 뿐 아니라 부당 전보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 MBC노조 김연국 위원장은 보도국의 80퍼센트 가량을 2012년 파업 때 채용한 경력 기자로 채워 넣어 "소위 DNA 물갈이가 됐다"고 지적했다. KBS 사측은 청와대의 보도 개입에 침묵했다고 비판한 기사를 부당 전보시키기도 했다.

부패한 정권의 편에 서서 진실을 외면하고 언론 노동자들의 입을 막아 온 사장 고대영·김장겸, KBS이사장 이인호, 방민진 이사장 고영주가 지금 당장 물러나야 한다는 노동자들의 요구는 지극히 정당하다.

쥐어짜기

한편, 이 낙하산 사장들은 노동조건도 공격해 왔다.

KBS 사측은 임금피크제를 실시했고, 비용 대비 산출을 강조하며 긴축을 강요해 왔다. 현재 부분적으로 시행 중인 성과급제를 모든 노동자들에게 적용할 뜻도 밝혔다. 성과급제가 시행되면 회사 경영진과 간부들의 입맛에 따라 성과 평가가 좌우돼, 노동자들은 더욱 관리자 눈치를 보게 될 것이다. 이미 MBC는 저성과자를 R등급으로 분류해 부당 전보 등을 일삼고 있다. 성과 평가에서 시청률과 비용 절감이 우선시되면 공정성이 약화되는 것도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부사장 권한을 강화하는 잡포스팅 제도와 송출인력 1인 근무 등도 노동자들의 불만 사항이다.

MBC에서는 기본급이 몇 년 동안 거

의 오르지 않았다. 2013년에는 지역 MBC에서 정기 상여금이 체불되는 일도 벌어졌다. 사측은 제작비를 삭감하고, 월차 수당을 반납하도록 했다. 지역방송사 사장 임명 기준에서 경영평가 비율이 높고, 그중에서도 인건비 항목을 주요 평가 사항으로 삼는 것도 감원과 임금 삭감을 압박하는 효과를 냈

다. 비용 절감 논리는 제작 시간을 최대한 줄이도록 해서 방송영상 분야 제작 스태프들의 평균 노동시간이 하루 10.4시간에 이를 정도다(방송영상 제작 스태프의 근로환경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진흥원, 2011). 반면에 지난해 MBC 사장과 임원 7명은 성과급만 1억 8000만 원을 챙겼다.

외주화와 비정규직도 확대됐다. MBC에서는 미술 부문과 식당 등 시설의 외주화가 강행되고, 기술과 영상 미술 부문에서는 촉탁직이 채용됐다. 2013년부터 2년 동안 1300여 명이 비정규직으로 채용됐는데, 같은 기간 정규직 채용은 150여 명에 불과했다.

따라서 이번 투쟁에서 사장 퇴진과 함께 노동 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다. 이는 기술직 노동자들이 파업에서 더욱 주도적 구실을 하도록 고무하고, 노동자들의 단결과 파업의 힘을 강화할 수 있다. 단결력 강화는 사장 퇴진 이후에도 경영진이 쉽사리 노동조합을 공격하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노동자들의 단결과 저항할 자신감이야말로 부당한 외압에 맞서는 결정적 힘이다.

두 방송사 노동자들이 이번 파업에서 승리해 부당한 외압에 굴하지 않는 언론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김지윤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노동자연대는 이윤을 위해 노동자 대중의 삶을 희생시키는 자본주의를 반대하고 이와는 다른 세계를 추구하는 노동자 운동 단체입니다.

노동자연대는 다른 세상을 만들 힘은 노동자 계급과 파업인 대중의 아래로부터의 투쟁에 있다고 믿으며, 노동자 투쟁에 참여하고, 연대를 건설하고, 투쟁 승리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려 노력해 왔습니다. 노동자·학생·청년 등으로 구성돼 있고, 서울, 부산, 인천, 경기, 울산, 강원충북 등에 지회들이 있습니다. 전교조·공무원·금속·건설 등에 노동자 모임이 있으며, 더 많은 부문에서 노동자 모임을 만들려 합니다.

이름

이메일

소속 (☐ 직장 | ☐ 노조 | ☐ 대학교 | ☐ 종교동학교 | ☐ 기타)

☐ 휴대전화번호

회비/약정액 (회비 기준액은 월 2만 원 이상, 단 대학생은 1만 원, 청소년·이주노동자 5천 원 이상)

☐ 2만 원 | ☐ 3만 원 | ☐ 4만 원 | ☐ 5만 원 | ☐ 기타 () 원

* 본인은 위의 정보를 노동자연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입 신청일: 년 월 일 (서명)

www.workerssolidarity.org

* 신청서를 작성해 사진을 찍어 010-4909-2026 또는 mail@workerssolidarity.org로 보내주세요.
* 웹사이트에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